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신안군, 연륙·연도교 잇따라 개통... “이젠 배 아닌 차로간다”

1989년 신안1교 이후 22개 교량 중 13개 완공

섬주민 이동권·농수산물류 수송 등에 대변혁

1004개의 섬을 지녀 ‘천사의 섬’이라 불리는 전남 신안군에 섬과 섬, 섬과 물을 잇는 연륙·연도교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89년 12월 안좌도와 팔금도를 연결하는 신안1교가 첫 완공된 이후 연도·연륙교 개통이 이어지면서 섬주민들의 섬살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19일 임자대교(지도 점암~임자진리)에 이어 29일 암태도 수곡리와 추포리를 연결하는 추포대교 개통식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추포대교는 연장 1.82km 해상교량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됐다.

추포도 주민들은 그동안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차면서 통행이 불가능한 300여 년간 노둑

길 인생에서 벗어나는 속원을 이루게 됐다.

이번 추포대교 개통으로 신안군의 연륙·연도교 건설 계획은 전체 22개소 51.212km 중 13개소 10.952km가 완공됐다. 연륙·연도교가 속속 개통되면서 일명 신안군의 웃섬인 임자도와 증도, 사육도 등은 지도음을 거쳐 육지인 무안군과 연결됐다. 또 암태도와 팔금, 안좌, 자은도 등 큰 섬은 물론 안좌 자라도, 암태 추포도 등 부속섬들도 압해도를 거쳐 목포와 무안으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압해도와 암태·팔금 등 4개 섬을 연결하는 천사대교 개통은 신안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하며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고 있다.

천사대교 이용 차량은 개통 첫해 8개월만에



신안 지도-임자간 해상교량(오른쪽)과 추포-암태간 해상교량

231만대를 기록한데 이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에도 206만대에 달했다.

신안군의 연륙·연도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수송은 물론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이동해 또 다시 육상 교량을 이용해야 했던 주민들이 섬에서 서울

은 물론 광주 등으로 한번에 이동하게 됐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어 가는 것이다. 또 물류비 절감은 풍부한 지역 농수특산물의 가격상승과 주민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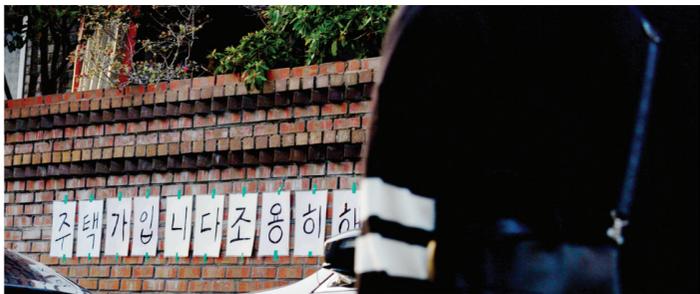
군은 현재 국도 77호선 암태-화원간 공사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9월 착공할 예정이며, 안좌 자라-장산 구간도 입찰을 준비하

는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연륙·연도교는 물류수송비 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시급한 암태 추포-비금 가산과 장산-신의 구간 연도교 공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상권 활성화는 좋지만”... 광주 동리단길 불법주차·소음 ‘이중고’



26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주택가에서 ‘소음 자제’ 안내 문구가 부착됐다.

“동명동 상권이 활성화되니 반길 일입니다만, 살기 좋은 곳은 아닙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구 도심인 동명동 주택가에 카페·식당이 들어서면서 ‘동리단길’ 상권이 형성됐지만, 늘어난 유동 인구만큼 불법 주·정차와 각종 생활 소음에 따른 원주민 불편이 여전하다.

지난 26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

이른바 ‘동리단길’(동명동+이태원 경리단길의 합성어)로 불리우는 이 곳은 주택 사이에 오래된 빈 집을 개조해 감각적으로 꾸민 술집·식당이 즐비했다.

‘동리단길’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이른바 ‘핫플레이스(핫플·HotPlace)’, ‘셀카맛집’ 등으로 불리우며 2030세대의 명소가 떠올랐다.

인파가 오가며 침체된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주거 지역과 상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특성 탓에 원주민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일대와 인접한 주택가·원룸 외벽 등지 곳곳에는 주민들이 붙여 놓은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안내문에는 ‘불법 주차 금지’, ‘주차개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담배 껍질 버리지 마세요’ 등이 쓰여있었다.

해가 지고 금요일 밤이 되자 동명동 일대에는 방문 차량이 줄지어 몰렸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갓길엔 주차 차량이 길게 늘어섰다. 변화가 인근을 수 차례 배회하던 운전자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앞에 차를 세우기도 했다. 갓길 주차 차량으로 인해 폭이 좁아진 도로에선 정체가 이어졌고, 뒤엉킨 차량 사이로 ‘뽕뽕’ 경적 소리가 들렸다.

동명동 주민 김모(63)씨는 “상권 활성화는 반기지만, 주말·평일 저녁에는 차량 정체·불

법 주·정차 만연...통행 불편
주거지·상권 경계 모호...주민 “살기 좋은 곳은 아냐”

법 주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번잡하다. (해당 시간대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떠오르는 명소인 만큼 충분한 차량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화가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어느 일행의 들뜬 대화 소리는 5m 가량 떨어진 주택 담벼락 밑에서도 들렸다.

동명동 50년 토박이인 김모(79·여)씨는 “주말이면 새벽 시간까지 상가에서 흘러나온 노랫소리, 취객 고성방가로 가끔 잠까지 설치다”고 토로했다.

51년째 동명동에 산 하모(88·여)씨는 “아침 일과는 집 주변 골목에 떨어진 담배 껍질과 찌꺼기, 술집 손님들이 주택 근처까지 와 흡연을 해 고역이다. 살기 좋은 곳은 못 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동구청에 접수된 동명동 일대 소음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2018년 16건 ▲2019년 5건 ▲2020년 3건 등이다.

동명동 일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

수도 ▲2018년 1711건 ▲2019년 4226건 ▲2020년 4031건 등으로 집계돼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1분기에도 900여 건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

동명동에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용 주차장 시설은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는 동명동 30만㎡ 일대 거리 정비·거점 공간 조성을 목표로 ‘광주대표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 60면 규모(991㎡)의 ‘동명동 공용 주차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꼬이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동구 관계자는 28일 “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상점을 방문해 ‘음향 장치 음량을 줄여달라’고 계도 활동을 벌인다. 주정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파가 줄어 민원은 줄었지만 앞으로도 소음·주정차 등 각종 민원을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